

칠레 제헌의회 선거결과와 전망

홍성우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swhong@kiep.go.kr, Tel: 044-414-1150)



차 례

1. 제헌의회 선거 개요 및 결과
2. 선거 배경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1년 5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칠레의 제헌의원 선출을 포함한 시장, 시의원, 주지사 선거 등 총 4개의 선거가 치러졌는데, 선거 결과 보수 성향의 여당 연합은 제헌의원 155석 중 37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진보 성향의 야당은 총 53석, 그 뒤를 이어 무소속 후보들이 48석을 차지하였음.
 - 제헌의회에서 제정될 신헌법은 각 조항마다 제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바, 보수 여당 연합은 3분의 1미만의 의석수를 보유하게 되어 현행 헌법의 급진적인 변화를 저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짐.
- ▶ 칠레 역사 상 처음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의 직접적인 발단은 2019년 10월 발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으나 그 기저에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
 -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신(新)헌법 제정 움직임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평등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이를 과거 군부독재 피노체트 정권하에서 제정된 헌법의 유산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 칠레의 불평등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지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저소득층이 늘지 않는 소득과 줄지 않는 소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음을 가능성이 높음.
 - 2011~12년과 2016~17년 사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불평등은 악화된 반면, 소비 격차는 감소한 사실을 볼 때 저소득 가구의 재정적 압박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 제헌의회 선거결과는 보수 여당 연합의 패배와 무소속 후보들의 예상 밖 약진, 그리고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신헌법 제정으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피노체트 정권하에서 제정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교육·의료·복지 등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었고, 대규모 시위 기간 중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신헌법 제정 요구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됨.
 - 피노체트 집권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칠레에서는 국영기업 중 96%가 민영화되었음.
- ▶ 제헌의회 선거에서 보수 연합 정당의 패배로 향후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칠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무소속 제헌의원이 다수 선출되어 기존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 간, 또는 무소속 의원들 간 입장이 쉽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 제헌과정의 복잡한 양상을 띠는 가능성이 있음.
 - 제헌의회 선거결과가 발표된 이후 칠레 폐소화 가치와 주가지수가 급락함.
- ▶ 심각한 불평등이 야기한 국가적 혼란은 칠레가 과거에 추진해왔던 민영화 및 개방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칠레 대선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 제헌의회 선거 개요 및 결과

■ 2021년 5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칠레의 제헌의원 선출을 포함한 시장, 시의원, 주지사 선거 등 총 4개의 선거가 치러졌음.

- 155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하는 제헌의회 선거결과 급진 성향 및 중도 성향의 진보 정당이 총 53석, 그 뒤를 이어 무소속 후보들이 48석을 차지한 반면, 보수 여당 연합은 37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음.
- 155석 중 나머지 17석은 원주민 대표에게 할당되었음.
- 칠레 역사상 처음 치러진 이번 제헌의원 선거는 2019년 10월 발발한 칠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직접적 발단이 되었으나, 그 기저에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

■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신헌법 제정의 첫 단계로 제헌의회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헌의원 선출은 2021년 4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칠레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한 재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5월로 연기되어 실시되었음.

- 제헌의원 선출을 포함한 시장, 시의원, 주지사 선거 등 총 4개의 선거가 2021년 4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5월 15일과 16일에 치러졌음.
- 칠레 역사상 양일에 걸쳐 선거를 실시한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선거안을 의회가 승인한 이유는 △4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투표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때문임.¹⁾

■ 칠레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에서는 선출된 의원의 남녀 간 성비가 균형을 이루고, 원주민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수한 선거제도가 적용되었음.²⁾

- 비례대표선거제 방식을 통해 28개 선거구 내 총 155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함.
- 선거구별로 선출된 제헌의원의 성비가 1:1에 가깝도록 만들기 위해서 각 정당의 첫 번째 후보는 여성, 두 번째 후보는 남자가 되어야 함. 즉 여성 후보를 시작으로 남녀가 번갈아가며 비례대표 후보를 구성해야 함.
- 한편 제헌의회가 원주민의 대표성을 띠도록 하기 위해서 총 155석의 제헌의원 의석 중 원주민 대표에게 17석이 할당되었음.
- 2017년 인구통계를 근거로 18세 이상 원주민의 인구수에 따라 의석 수가 할당되는데 마푸체족(Mapuche) 7석, 아이마라족(Aymara) 2석 등을 포함한 총 10개 부족이 제헌의원 의석을 할당받음.
- 원주민 대표에게 할당된 17석에 대해서는 원주민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³⁾ 일반 비례대표 선출과 마찬가지로 성비 균형이 맞추어져야 함.

1)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2021. 3. 16), 「칠레 제헌의회 선거를 포함한 4월 선거, 2일간 연속 시행」, <https://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oQyi4iOSyZZqstDtBgxP7w7yF9NPJ9dBe9cDpT7FJlPRutaXaYY7fsG0MZ9J1lU1Xu6NnmfQF0oEbcjsdee6%2Bo%3D>

2)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2021. 4. 7), 「칠레 제헌의회 선거일정 연기 및 선거제도 특징」의 자료를 재정리하였음. <https://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oQyi4iOSyZZqstDtBgxP7x3P6kUFsyuDa7gYmK88jHMDAqccmsS8yP34hCHmUNnrMP64R8HqYwyx3H%2F2F8s4HE%3D>.

3) 원주민 제헌의원 선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칠레 국회도서관(Biblioteca del Congreso Nacional de Chile)의 Constitutional Convention 자료를 참고. <https://www.bcn.cl/leyfacil/recurso/convencion-constitucional>.

- [선거결과] 제헌의회 선거결과는 보수 여당 연합의 패배와 무소속 후보들의 예상 밖 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보수 여당 연합은 37석으로 전체 155석 중 약 23.9%를 차지하는 것에 그쳤으나, 무소속 후보는 48석으로 전체 의석 수의 약 31.0%를 차지하였음.
 - 제정될 신헌법은 각 조항마다 제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바⁴⁾, 보수 여당 연합은 3분의 1 미만의 의석수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현행 헌법의 급진적인 변화를 저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짐.
 - 한편 제헌의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용한 선거제도로 남성 78명과 여성 77명이 제헌의원으로서 선출되었음.
- 향후 최대 1년 동안 제헌의회에서 제정될 신헌법은 2022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만약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신헌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현행 헌법을 유지하게 됨.

2. 선거 배경

- [제헌의회 선거 배경] 2019년 10월 12일 칠레 정부가 수도인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을 30페소(원화로 약 50원) 인상하기로 발표한 이후 10월 14일부터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10월 18일부터 산티아고를 포함한 주요 도시로 번지며 대규모 시위로 격화됨.
 - 2019년 1월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이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는데(20페소 인상),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인상되면서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은 역대 최고치인 830페소에 도달함.⁵⁾
 - 2019년 10월 18일 시위대에 의해 버스 정류장,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이 불타는 등 시위가 격화되자 피네라 대통령은 비상상태를 선포하며 군을 배치함.
 - 2019년 10월 19일 피네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지하철 요금 인상계획을 철회하기로 발표함.
 -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전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며 의료 및 복지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개혁요구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음.
 - 2019년 10월 25일 10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산티아고에서 대규모 시위를 펼쳤으며,⁶⁾ 칠레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2019년 11월 개최 예정이었던 APEC 정상회의를 취소함.
- [시위 이후 경과] 2019년 11월 15일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에 따라 과거 피노체트 군사정권 시절 제정되었던 헌법을 대체할 신(新)헌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잦아들기 시작하였고, 1년여 만에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제헌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4) 연합뉴스(2021. 5. 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8001951087?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검색일: 2021. 5. 18).

5) BBC News(2019. 10. 20), <https://www.bbc.com/mundo/noticias-america-latina-50115798>(검색일: 2021. 4. 19).

6) DW(2019. 11. 25), <https://www.dw.com/es/la-cronolog%C3%ADa-del-estallido-social-de-chile/a-51407726>(검색일: 2021. 4. 19).

- 대규모 시위 기간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제도 개선, 소득세 인하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위대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음.
- 피노체트 정권에서 제정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교육·의료·복지 등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신헌법 제정 요구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됨.⁷⁾
- 2020년 4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신헌법 제정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된 후 2020년 10월 25일 시행되었음.
 - 국민투표는 △제헌에 대한 찬반 여부와 △신헌법 제정 시 제헌의회 의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진행되었음.
 - 국민투표 결과 제헌에 찬성(78%)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제헌기구의 제헌의원을 국민대표 100%로 구성하는 안을 선택(79%)한 비율 역시 매우 높았음.

■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이후 신헌법 제정을 야기한 근본적 원인으로 불평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칠레의 불평등 현상은 소득불평등 심화와 함께 소비 또는 지출 측면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 주변국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분석은 칠레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함.

- 칠레에서는 최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 지출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득불평등 심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각할 수 있음.
- 따라서 불평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에 대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함.
 - 저소득 가구는 근로소득의 약 30%를 교통비로 지출하는 반면, 고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2% 미만임.⁸⁾

■ [빈곤] 칠레의 가구지출조사(Encuesta de Presupuestos Familiares)⁹⁾를 활용하여 월 가구총소득 기준으로 살펴본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조사기간 동안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월 가구지출액 기준으로 살펴본 상대적 소비 빈곤율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2016~17년에 감소한 것을 볼 때 두 지표의 추세 간 차이가 있음(그림 2 참고).¹⁰⁾

- 가구지출조사에서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상대적 소득 빈곤선은 1987~88년에 7만 1,047페소에서 2016~17년에 21만 1,309페소로 조사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상대적 소비 빈곤선은 2006~07년과 2011~12년 사이에 한 차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였음(그림 1 참고).
- 소득 빈곤율은 1987~88년에 19.4%를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6~17년에 20.0%를 기록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소비 빈곤율은 1987~88년에 18.1% 이후 2011~12년에 20.0%까지 증가하였고 2016~17년에 17.7%로 감소하였음.

7) 조윤희(2020),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칠레의 개헌 열차」, KDI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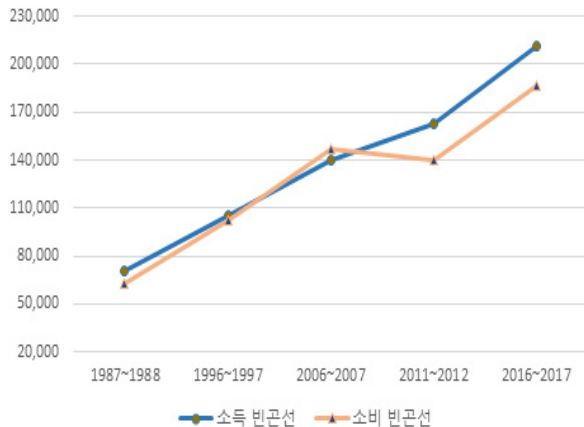
8) BBC News(2019. 10. 20), <https://www.bbc.com/mundo/noticias-america-latina-50115798>(검색일: 2021. 4. 19).

9) 동 조사는 10년 단위로 실시되다가 2007년 이후부터 5년 단위로 실시되었으며,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사되었음.

10) 우선 가구지출조사 데이터에서 계산한 중위소득(중위소비)의 50%를 상대적 소득 빈곤선(소비 빈곤선)으로 정의하고, 동 빈곤선 이하의 소득(소비)을 갖는 가구의 비율을 소득(소비) 빈곤율로 정의하였음. 한편 소비 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소득 빈곤율을 계산하는 동일한 방법을 가구 지출액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소비 빈곤율이라고 명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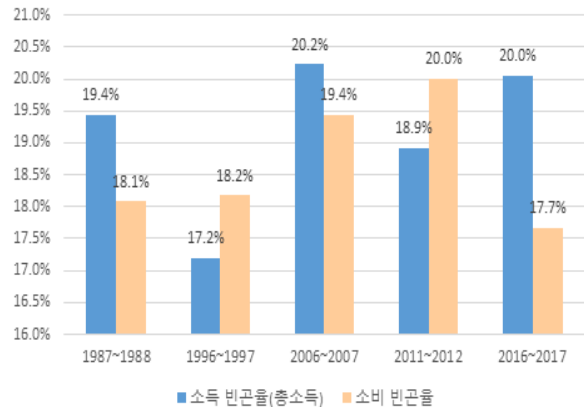
- [그림 2]에서는 소득 빈곤율과 소비 빈곤율의 추세가 다른 점, 2011/2012년과 2016/2017년 사이에 소비 빈곤선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빈곤율은 하락한 점, 그리고 2016~2017년의 소득 빈곤율은 소비 빈곤율보다 높았고 그 격차가 조사된 기간 중 가장 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¹¹⁾

그림 1. 소득 빈곤선과 소비 빈곤선의 변화
(단위: 칠레 페소)



자료: 칠레의 가구지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소득 빈곤율과 소비 빈곤율의 변화



자료: 칠레의 가구지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2011~12년과 2016~17년의 빈곤율을 비교할 때 저소득층의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지출은 소득 감소분만큼 함께 줄지 않아 다른 기간에 비해 저소득 가구는 재정적으로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가구지출조사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필수재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공공요금과 교통 (transport)에 대한 소비 빈곤율은 동 기간 동안 감소(11.06%→10.35%, 32.38%→28.26%)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동안 이 항목에 대한 저소득층의 지출이 오히려 증가했을 가능성을 의미함.
- 실제로 동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의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은 8만 1,517페소(2011~12년)에서 12만 1,479페소(2016~17년)로 증가하였고,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도 동 기간 동안 1만 5,747페소(2011~12년)에서 2만 3,818페소(2016~17년)로 상승함.
-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는 2010년 26.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36.9%, 2018년 39.7%를 기록하였음.¹²⁾

■ [불평등] 월 가구총소득과 월 가구지출액을 이용하여 10분위 비율로 평가한 소득 및 소비 불평등도를 살펴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경향이 나타남(그림 3 및 4 참고).

- [그림 3]은 소득과 소비의 1분위 값 대비 9분위 값(I90/10, C90/1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1/2012년과 2016/2017년 사이에 두 패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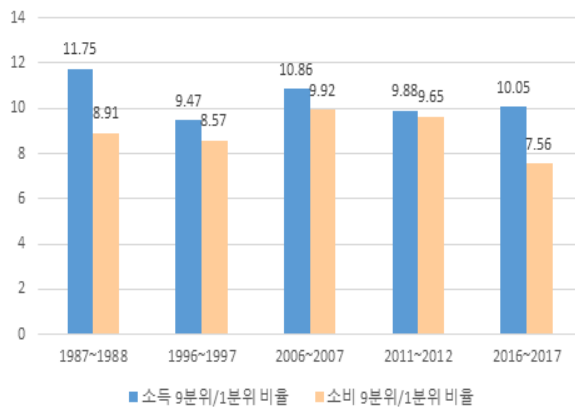
11) 가구총소득 대신 가구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 빈곤율은 [그림 1]에 제시된 값보다 낮아질 것임. 그러나 가처분소득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소득 빈곤율의 추세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함. 참고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산출한 2011~12년과 2016~17년의 소득 빈곤율은 각각 17.7%와 18.8%임.

12) CEIC, <https://www.ceicdata.com/en/indicator/chile/household-debt-of-nominal-gdp>(검색일: 2021. 5. 10).

13) I90/10과 C90/10은 각각 1분위 대비 9분위의 소득 비율과 소비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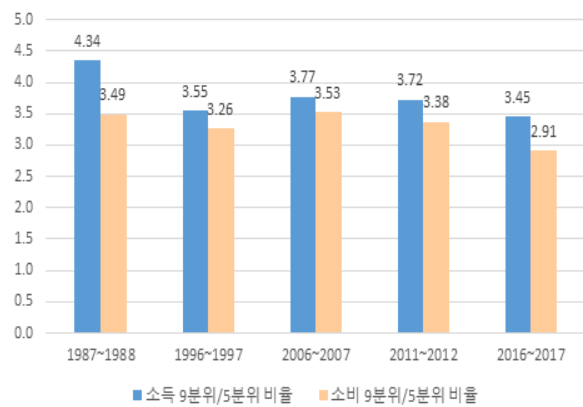
- I90/10은 2011~12년에 9.88을 기록한 후 2016~17년에는 10.05로 소폭 증가한 반면, C90/10은 같은 기간에 9.65에서 7.56으로 하락함.
- 이는 동 기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불평등은 악화된 반면, 소비 격차는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즉 의료비, 교통비 등 필수재에 대한 지출로 정의될 수 있는 핵심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은 감소한 반면, 핵심 생계비는 증가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을 수 있음을 의미함.
- 두 소득계층 간 소비 격차의 감소는 필수적 성격의 공공서비스가 대체로 민영화되어 서비스 요금이 높은 칠레의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 소득 및 소비 불평등(9분위/1분위)



자료: 칠레의 가구지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소득 및 소비 불평등(9분위/5분위)



자료: 칠레의 가구지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한편 [그림 4]는 소득과 소비의 5분위 값 대비 9분위 값(I90/50, C90/50)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 3]과는 달리 조사기간 동안 소득과 소비 불평등도의 패턴이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2011~12년과 2016~17년 사이에 I90/50(3.72→3.45)과 C90/50(3.38→2.91)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다만 이 기간 동안 C90/50 감소율이 13.9%를 기록하여 7.2% 줄어든 I90/50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하였음.

■ 칠레의 가구지출조사 데이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2011~12년 대비 2016~17년에 소득 빈곤율은 증가하였고 소득과 소비 불평등 지표 모두 악화되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불평등 지표가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불평등 심화는 고소득층과 중산층 사이에서보다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짐.
-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었고 소비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재정적 압박이 심각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3. 전망 및 시사점

■ 2019년 10월 발발한 칠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이후 이어진 신헌법 제정 움직임을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평등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특히 악화된 소비 불평등을 과거 군부독재 피노체트 정권하에서 제정된 헌법의 유산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칠레에서는 전력, 교육, 의료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문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주변 남미 국가들에 비해 동 부문의 민영화 정도가 상당하며, 결과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이 높아 가계,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큼.
- 1980년부터 1992년까지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도를 살펴보면, 칠레에서는 국영기업 중 96%인 총 501개의 기업이 민영화되었던 반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 각각 45개, 42개의 기업이 민영화되었고, 이는 총 국영 기업에서 15%와 6%에 해당하는 수치임.¹⁴⁾
- [그림 2, 그림 3, 그림 4]에서 확인하였듯이 최근 들어 심화된 소득불평등과 함께 고소득-저소득 계층 간 줄어든 소비 격차, 즉 소비불평등도의 완화가 의미하는 바는 저소득층이 늘지 않는 소득과 줄지 않는 소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음을 암시함.

■ 상당수 무소속 후보들의 제헌의원 당선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새로운 헌법 제정으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피네라 대통령은 이번 선거결과가 그동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현 정부와 기존 정당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언급하였음.¹⁵⁾
- 일부 전문가들은 무소속 후보의 대부분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는데¹⁶⁾, 전체 제헌의회 의석 수의 3분의 1에 크게 미치지 못한 보수 여당 연합의 선거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향후 현 헌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한편 제헌의원 투표율은 41.5%¹⁷⁾를 기록하여 2017년 12월 대선 투표율(49.02%)과 2010년 10월 신헌법 제정에 대한 국민투표율(50.9%)과 비교할 때 저조한 편이었음.

■ 무소속의 제헌의원이 다수 선출되어 헌법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 간, 또는 무소속 의원 개인 간 입장 차이가 쉽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 제헌과정의 복잡한 양상을 띠 가능성이 있음.

14) 김기현, 권기수(2017),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이해: 자원, 불평등, 그리고 개혁」, 한울아카데미.

15) The Wall Street Journal(2021. 5. 17), <https://www.wsj.com/articles/chile-elects-left-leaning-assembly-to-replace-dictatorship-era-constitution-11621270721>(검색일: 2021. 5. 18).

16) 연합뉴스(2021. 5. 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8001951087?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검색일: 2021. 5. 18).

17) <https://www.servelecciones.cl/>(검색일: 2021. 5. 18).

■ 제헌의회 선거에서 보수 연합 정당의 패배로 향후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칠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달러당 칠레 페소는 5월 17일 703.17페소를 기록하였으나 선거결과가 확정된 5월 18일 715.62페소를 기록하며 하루 사이에 페소화 가치가 약 2% 하락하였음.¹⁸⁾
- 칠레 주가지수인 IPSA Index는 하루 사이에 9.33% 하락하였음.¹⁹⁾

■ 심각한 불평등이 야기한 칠레의 국가적 혼란은 과거에 추진한 민영화 및 개방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져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대선일정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의 선거결과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나라로 대표되는 칠레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제헌의회 구성은 향후 주변국의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남미 주요국들의 향후 대선일정은 다음과 같음.
 - 페루: 2021년 4월 12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 결과 급진 진보 성향의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후보와 보수 성향의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여 6월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
 - 브라질(2022년 10월), 콜롬비아(2022년 5월), 아르헨티나(2023년 10월), 파라과이(2023년 4월) 등임. **KIEP**

18) 칠레 중앙은행, https://si3.bcentral.cl/Siete/ES/Siete/Cuadro/CAP_TIPO_CAMBIO/MN_TIPO_CAMBIO4/DOLAR_OBS_ADO(검색일: 2021. 5. 18).

19) <https://www.marketwatch.com/investing/index/spipsa?countrycode=cl>(검색일: 2021. 5. 18).